

목 차

I. 2017년 경제전망

II.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전망

III.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IV.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목 차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 서민금융

금융산업 주요이슈 (1/3)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필요

보험산업

— 보험상품 가격자율성 제고, IFRS4 Phase2 도입 대비 등

여전업

— 핀테크 경쟁 심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 정책자금 확대, 예대율 등 규제완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정책 서민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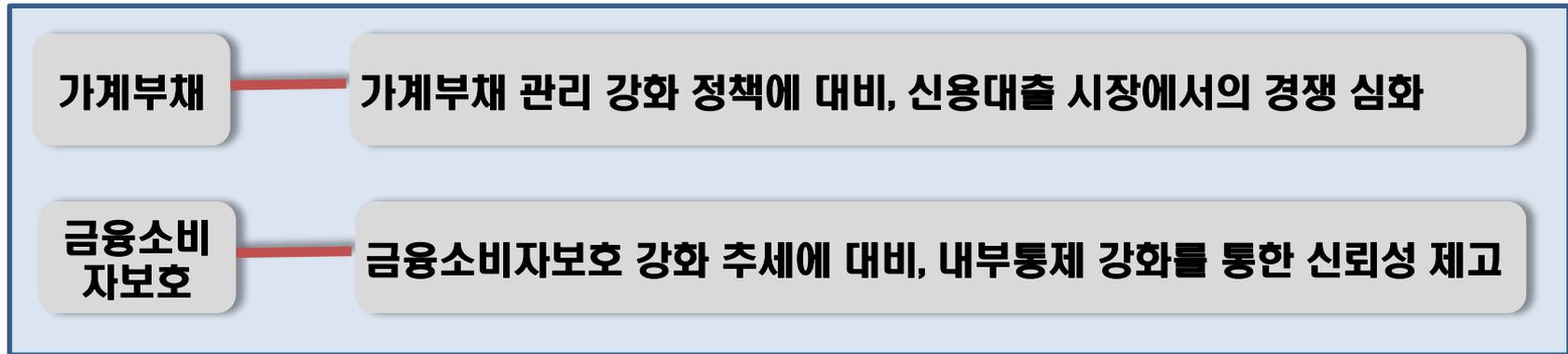
—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민간 서민금융과의 조화 등

◆ 비은행권은 제도,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경영성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준비·대비 필요

- 보험사는 자율성 확대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신회계기준에 대한 대비 필요
- 여전업은 경쟁심화에 따른 성장성 정체가 예상되므로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출구 모색 필요
- 서민금융회사는 견조한 수신기반에 따른 성장성 유지가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에 대비할 필요

금융산업 주요이슈 (2/3)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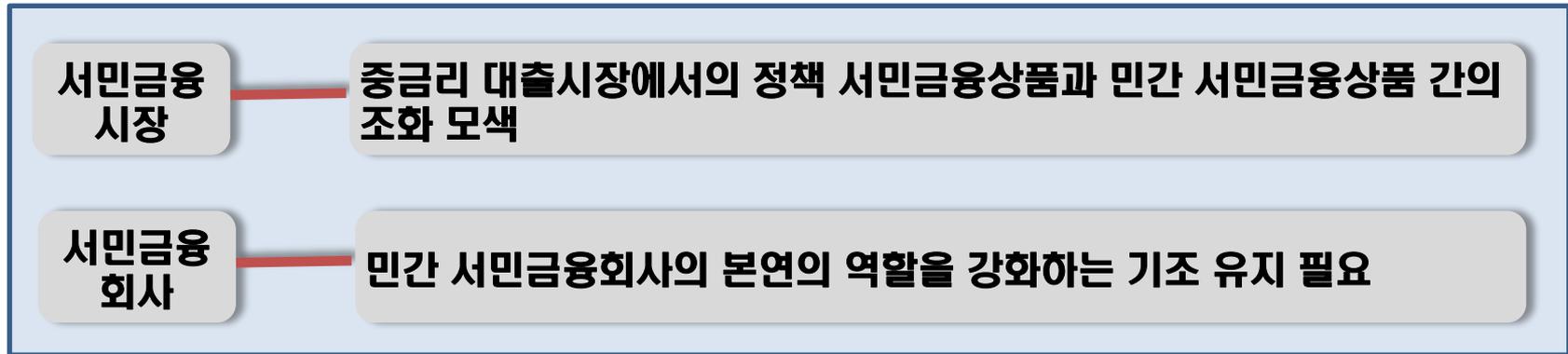


◆ 가계부채 이슈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제2금융권은 가계부채 정책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신용대출시장 등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수익원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
- 저축은행, 여전사, P2P 등을 통한 업권내·업권간 신용대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악화 방지 노력 필요
- 보험사 및 제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하므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뢰성 제고 필요

금융산업 주요이슈 (3/3)

◆ 민간 서민금융과 정책 서민금융간의 조화로운 서민금융 정책 추진 필요



◆ 중장기적인 서민금융시장의 밑그림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서민금융 간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할 필요

- 중금리 대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그 동안의 금리단층 현상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민간 서민금융과 정책 서민금융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
- 민간 서민금융회사는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서민 금융회사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에서의 시장실패 영역을 파악하여 갭(gap)을 메우는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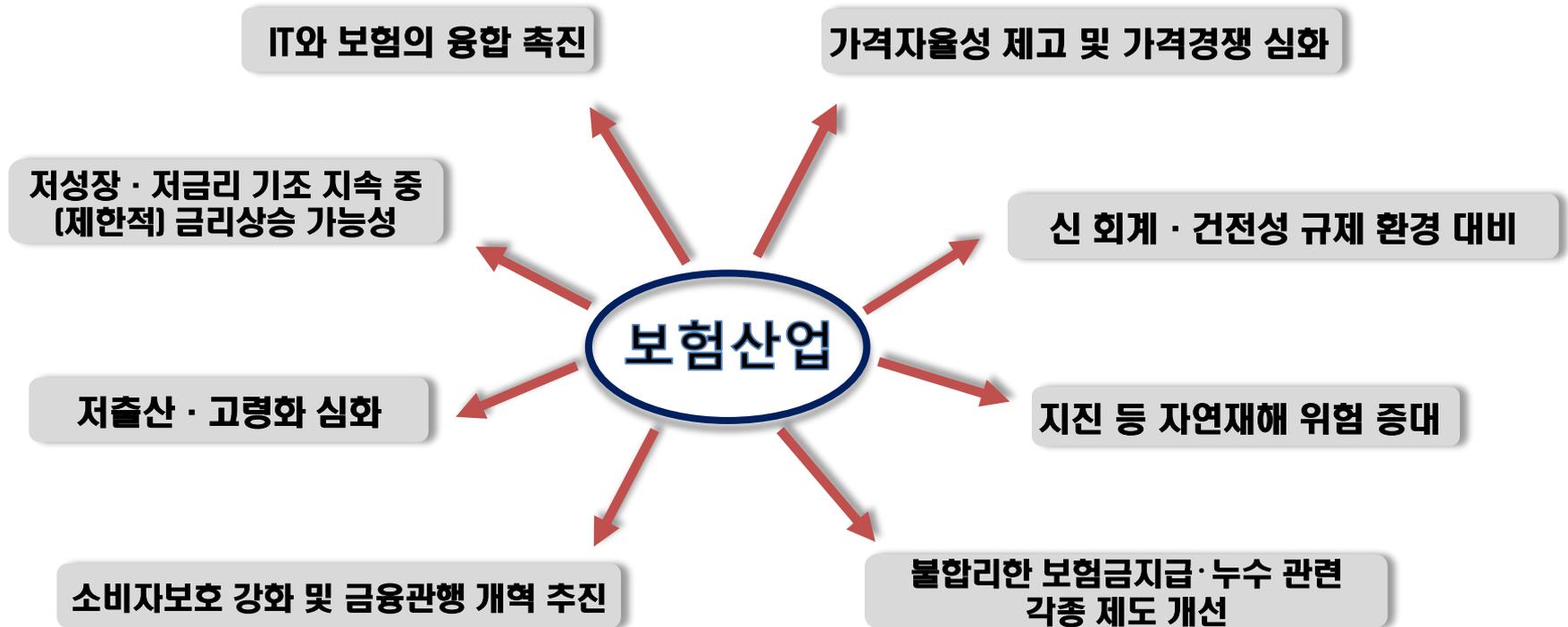
목 차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1. 개관
-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 서민금융

가. 2017년 보험산업 경영환경

- ◆ 2017년 보험산업 경영환경은 기존 거시·금융환경 추세가 지속·심화되는 가운데, 자율성 제고 하에 책임경영 강화 요구



나. 2017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생명보험)

기회 요인

- ◆ 100세시대 노후소득준비, 건강관련 상품 수요 지속
- ◆ 보험상품 가격자율성 제고
 - 상품 개발·판매·운용의 다양성·혁신성·안정성 제고
- ◆ 보장성상품 위주 판매전략 전환
 - 금리리스크 부담 완화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
- ◆ 저비용·고효율 판매채널 활성화
 - 금융복합점포(제도 확대시행 기대),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등
- ◆ 자산운용규제 완화: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한 투자 영업 수익성 제고
- ◆ (제한적)금리상승 가능성
 - 투자영업 수익성 개선(이차역마진 완화)에 기여
- ◆ IFRS4 Phase2 도입: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체질 개선의 계기

위험 요인

- ◆ 경기회복 지연,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보험상품 구매여력 저하
- ◆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보험실효·해약 증가
-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 변액보험 판매·수익률에의 부정적 요인 지속
- ◆ 온라인 시스템(예: 보험다모아) 등을 통한 가격비교 기능 강화: 가격경쟁 심화
- ◆ 불합리한 보험영업관행 개혁 추진: 보험공급자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
- ◆ 저금리기조 하에 운용자산이익률이 보험부채 부담 이율을 하회하는 이차역마진 심화
 - 과거 판매된 고금리 확정형상품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신규 판매상품의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에 대한 부담도 심화
- ◆ 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 등에 따른 투자리스크 (환리스크 등) 증대 가능성
- ◆ 금리상승 가능성: 단기적으로 건전성지표(RBC비율)에 부정적요인으로 작용
- ◆ IFRS4 Phase2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강화: 지급여력 지표(RBC비율) 하락 우려, 자본확충 부담

나. 2017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손해보험)

기회 요인

- ◆ 100세시대 노후소득준비, 건강관련 상품 수요 지속
- ◆ 보험상품 가격자율성 제고
 - 상품 개발·판매·운용의 다양성·혁신성·안정성 제고
- ◆ 보험료율(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인상 효과 및 추가 인상 기대
- ◆ 지진, 태풍 등 대자연재해 및 유행성질병 등의 위험 증대: 중장기적으로 신성장·신수익원 기회
- ◆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위한 각종 제도개선 시행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
- ◆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안정화 위한 제도 개선(비급여 과잉진료 부분 등)
- ◆ 저금리기조 하에 금리리스크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
 - IFRS4 Phase2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음.
- ◆ IFRS4 Phase2 도입: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체질 개선의 기회

위험 요인

- ◆ 경기회복 지연,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보험상품 수요 저하
- ◆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여론 등) 가능성
- ◆ 불합리한 보험영업관행 개혁 추진: 보험공급자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
- ◆ 온라인 시스템(예: 보험다모아) 등을 통한 가격비교 기능 강화 추진: 가격경쟁 심화
- ◆ 지진, 태풍 등 대자연재해 및 유행성질병 등의 위험 증대: 손해율 악화 가능성
- ◆ IFRS4 Phase2 도입 및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 지급여력지표 하락 우려(특히 일부 중소형사)

다. 2017년 경영성과 방향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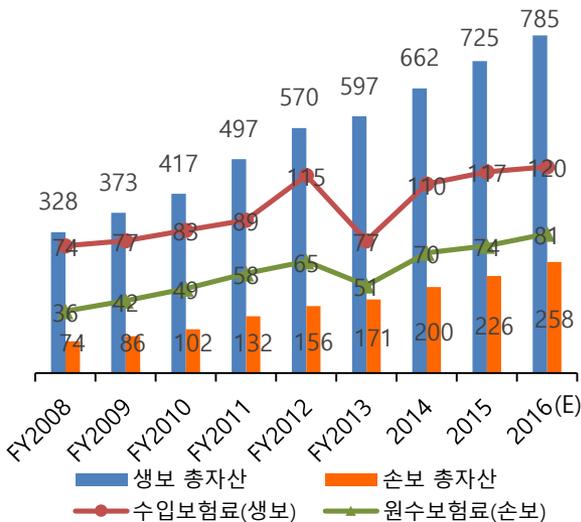
- ◆ 보험영업 부문에서의 뚜렷한 성장성·수익성 제고 유인이 부재하고 신회계제도·건전성규제 도입에 대한 부담도 심화되는 가운데, 저금리 등의 기조 하에 이차역마진 부담 및 수익성 둔화가 지속·심화될 우려

손해보험

- ◆ 금리리스크 및 신회계제도와 관련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가운데, 다양한 제도 개선(보험료율 인상 및 고가자동차 수리비·실손의료보험 비급여(과잉진료)·보험사기 관련) 등에 힘입은 손해율 안정화 및 수익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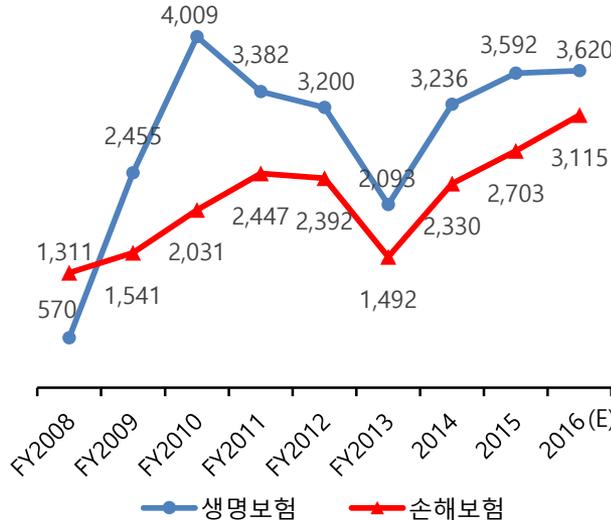
성장성(총자산, 수입보험료)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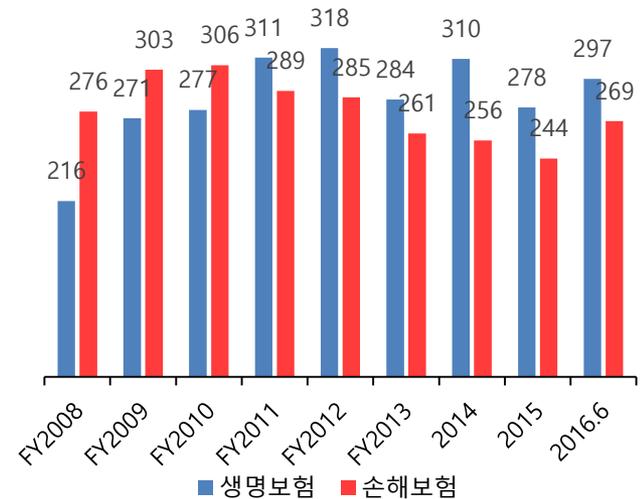
수익성(당기순이익)

(단위 : 십억원)



지급여력(RBC)비율 추이

(단위 : %)



라. 2017년 경영·정책 과제

-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안정화 및 불합리한 보험금 누수(보험사기 등) 근절
- ◆ 신수익원 발굴, 비용효율화 등을 위한 Digital Insurer 강화
- ◆ 저비용·고효율 판매채널 활성화 (방카슈랑스, 금융복합점포, 온라인(보험다모아) 등)
- ◆ 대자연재해·유행성질병 위험 등 관련 보험산업 역할 강화
- ◆ 소비자보호·권익 강화 (적합성 원칙 등)
- ◆ 신회계기준·건전성규제 선제적 대응
- ◆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산업 역할 강화
- ◆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신성장동력(신수익원) 및 투자영업부문에서의 안정적 수익원 발굴

<참고> IFRS Phase2 관련 핵심이슈 및 과제

- ◆ IFRS Phase2 도입 관련 핵심이슈 중의 하나는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경(원가평가→시가평가)
 - 보험사 입장에서 언젠가는 해소(지급)되어야 하는 부채이며, 숨어있던 리스크를 수면 위로 꺼내 놓는 계기로 인식될 필요
 -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

<과제>

- ◆ 저금리기조 하에 부채 추가 적립부담에 따른 선제적·구체적 자본확충 방안(전략) 마련
 - 자산매각(부동산 등), 유상증자, 이익유보 및 배당조정, 후순위채 발행(제도개선 필요) 등
- ◆ 금리보장 수준 축소(최저보증이율 관련) 및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상품 확대
- ◆ 부채현금흐름에 기반한 자산운용전략(liability driven investment strategy) 및 전사적 재무변동성 관리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필요

- ◆ 또 다른 핵심이슈로 수익인식과 관련, 보험수익이 수취시점이 아닌 전체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되며, 투자(저축)요소는 보험수익(매출)에서 제외

<과제>

- ◆ 외형 중심의 상품전략에서 탈피하여 내실(이익) 중심으로의 상품·영업 전략 전환 필요
- ◆ 손익의 예측 가능성 및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구조의 상품 개발·판매 필요

<참고> 대규모 자연재해 등 관련 보험산업 역할 강화

◆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유행성질병 등이 확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인적 피해가 발생

- 우리나라도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10년(2006~2015년) 간 자연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액이 5.5조원, 총 피해복구비용 및 사망자 수는 각각 10.8조원과 2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인명피해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경제적 손실액(억 달러)	3,800	1,700	1,350	1,100	1,000	1,790
보험금 지급액(억 달러)	1,050	700	350	310	300	542
사망자 수(명)	27,000	9,600	20,500	7,700	23,000	17,560

자료 : Munich Re, Annual Statistics, NatCatSERVICE

◆ 주요국 글로벌 보험사, 정책당국 및 학계 등은 이상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 리스크관리기법 연구, 투자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 보험사 및 정책당국 등도 대자연재해 리스크의 심각성 및 관리·보장 필요성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긴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

- 지진, 태풍 등과 같은 대자연재해와 관련된 상품의 개발, 위험예방활동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연관된 정책성보험에 대한 자원 확대, 보상방식 전환,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긴요
- 주요국에서와 같이 원보험·재보험시장의 인수능력 외에 추가적인 담보력이 필요할 때 초과위험을 자본 시장에 전가하는 수단인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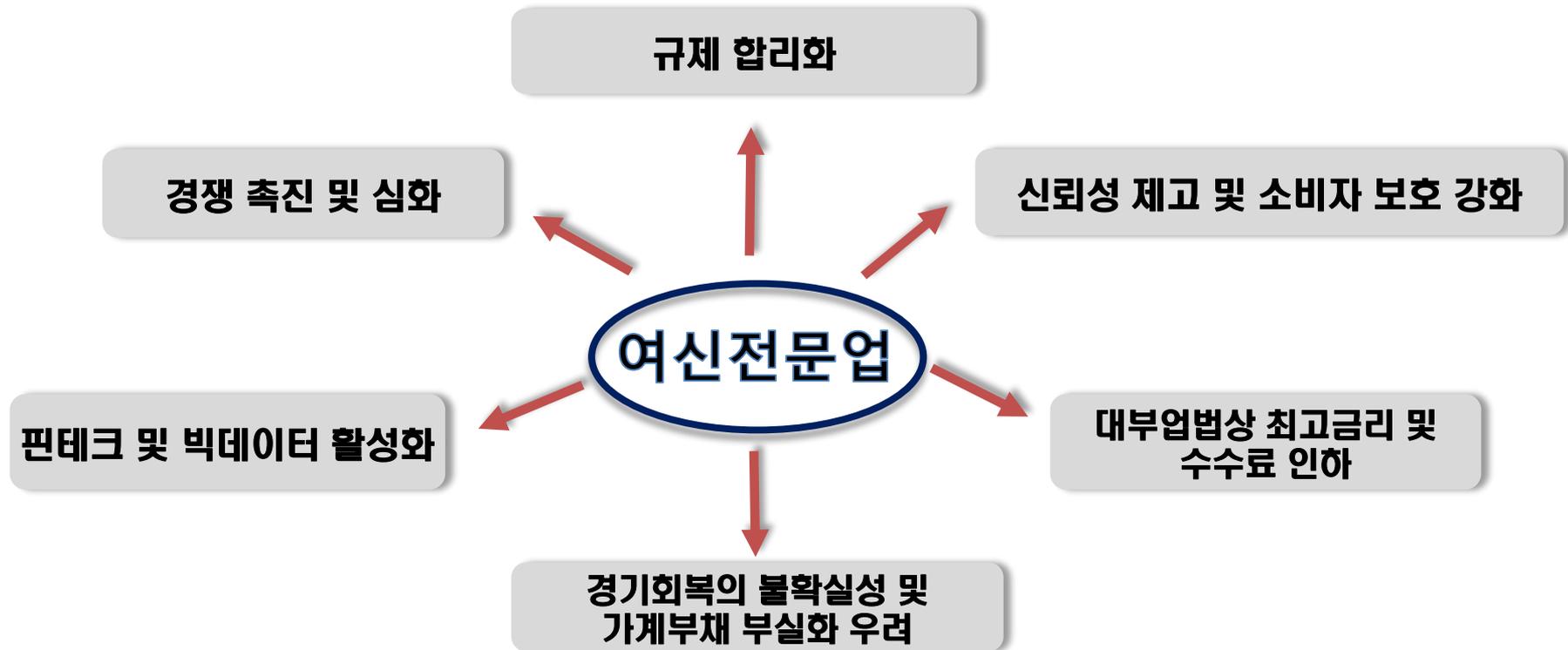
목 차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 서민금융

가. 2017년 여신전문업 경영환경

- ◆ 2017년 여신전문업 경영환경은 기회·우려 요인이 양존하는 가운데 위축 전망
 - 빅데이터 활성화와 신용카드 이용규제 완화로 여신전문업 발전 기대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및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 우려



나. 2017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신용카드업)

기회요인

- 빅데이터 활성화: 카드 사기 예방, 마케팅 활용 등
- 온라인카드 모집 시 규제 완화: 연회비 범위 내 이익 제공 허용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고지수단 확대
- 업무체계 합리화: 겸영업무로 외국환 업무 가능
- 비용절감: 무서명 거래 확대 및 부가서비스 합리화

위험요인

-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P2P 대출 성장 본격화
- 법정 최고금리 및 수수료 인하 효과 본격화
- 경기부진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카드론 등 다중 채무자 문제 대두
-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가맹점주 및 대주주 규제 강화, 광고 자율 규제 강화

다. 2017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기타 여신전문금융업)

기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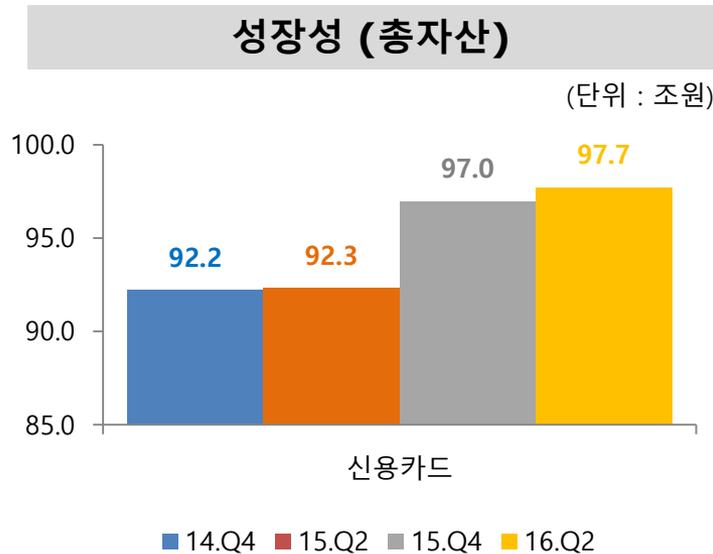
- 온렌딩 중개금융기관 확대: 영세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 여신전문금융업 겸영업무 확대: 외국 환업무 영위 가능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대상 확대
- 규제대상 대출 완화: (대출/총자산) 비중 산정 시 오토론 제외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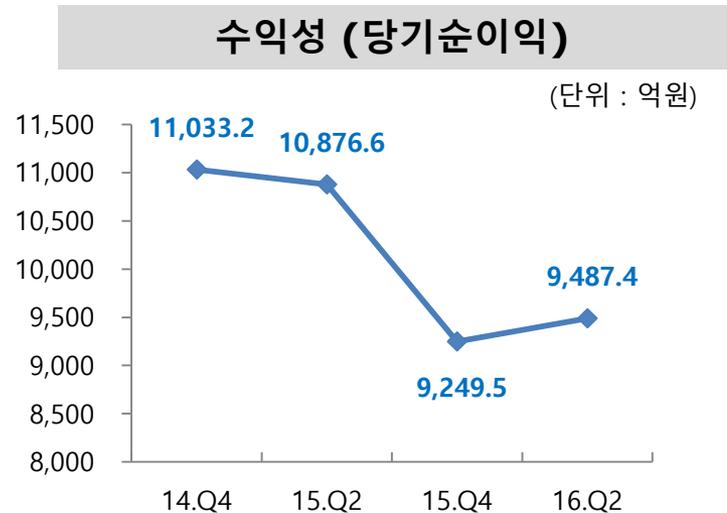
- 신기술사업 겸영여신자 확대: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금융투자업자 추가
- 오토론 등 할부금융 경쟁 심화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 본격화: 이자수익 감소
- 대출업무 영위 기준 강화: (대출자산/총자산) 비율을 30% 이내로 강화

라. 2017년 경영성과 방향(신용카드)

- ◆ 규제완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경기회복 지연으로 성장성이 정체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 출범 및 P2P 대출 성장 등에 따른 경쟁 심화로 고성장은 곤란
- ◆ 무서명 거래 확대 등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나 법정 최고금리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 본격화, 마케팅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은 정체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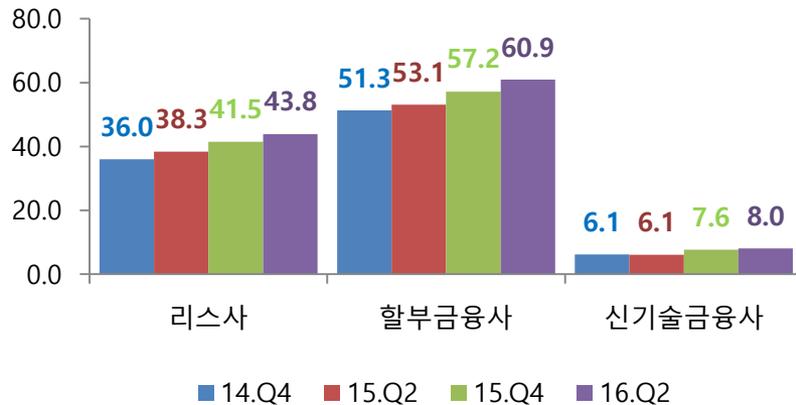
주: 당반기누계,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마. 2017년 경영성과 방향(기타 여전업)

- ◆ 온렌딩 금융 증개기관 확대, 외국환업무 겸영 허용 등으로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나, 대출자산 비율 규제 강화, 오토론 시장의 경쟁 심화,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으로 고성장은 곤란
- ◆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본격화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오토론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우량 고객 이탈 가능성 등으로 수익성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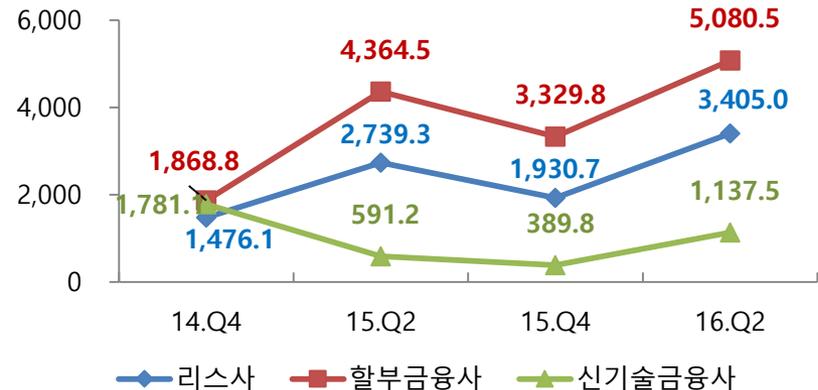
성장성 (총자산)

(단위 : 조원)



수익성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주: 당반기 누계,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바. 2017년 경영정책 과제

◆ 빅데이터, 핀테크 활용 신사업 발굴

◆ 국내시장 포화 극복: 해외시장 개척

◆ 수익원 편중 극복: 온렌딩 등 적극 활용

◆ 소비자 선별 정치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참고> 빅데이터 및 핀테크 활용 제고

- 실시간 마케팅 강화로 고객 유치율 및 수익성 향상
- 카드 사용액 상환을 위한 P2P 연계 대출 활용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강화



- 고객 데이터 분석능력 제고로 고객 마케팅, 서비스 활용 사례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으로 고객 선별 정치화
- 카드 고객 관리 및 리스크 관리 개선
- 비식별화 조치,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참고> 온렌딩 제도 활용 제고

- 중소/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온렌딩 지원에 리스방식을 추가
- 온렌딩 중개 여전사를 기존 3개에서 모든 여전사로 확대



-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 기계설비 리스 및 할부금융 등으로 스타트업 등의 영세 중소기업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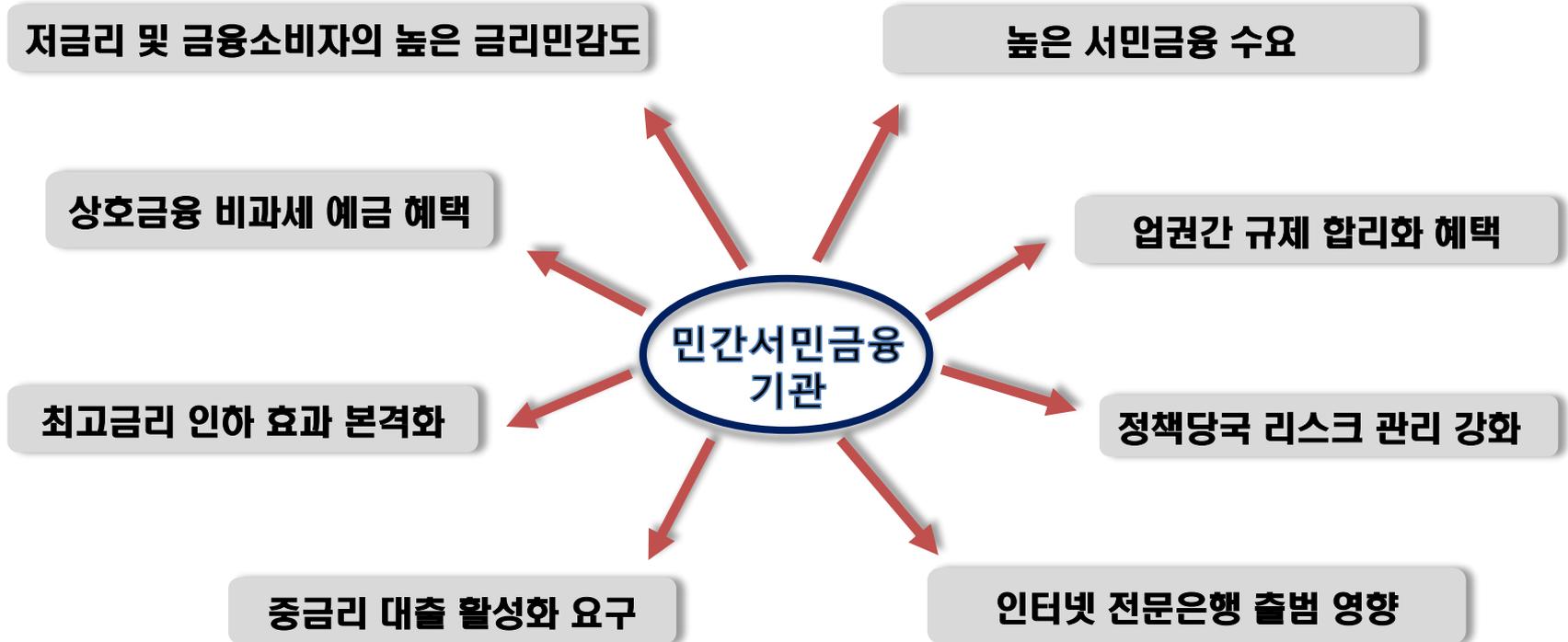
목 차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 4. 서민금융기관**
5. 정책 서민금융

가. 2017년 서민금융기관 경영환경

- ◆ 2017년 서민금융기관 경영환경은 견조한 여수신 기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나. 2017년 경영성과 전망 요인

기회 요인

- ◆ 저성장 기조 지속, 높은 체감물가, 주거관련 비용 부담 등에 따른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높게 지속
- ◆ 고령화 등에 의한 자영업 진입 확대 등이 지속되며 자영업자 자금수요가 높게 지속
- ◆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 가능성
- ◆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관련 자금 확대에 따른 신규수요 확보
- ◆ 비과세(상호금융) 지속 가운데 금리민감도가 높아진 고객 확대에 따른 수신확보 용이
- ◆ 업권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완화 혜택
 - 저축은행 개인신용공여 한도 상향(16년 상반기)
 - 저축은행 여심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16년 상반기)
 - 상호금융 예대율 완화(16년 하반기 및 17년)

위험 요인

- ◆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 가능성
- ◆ 부동산 가격 변동 등에 의한 가계, 자영업자 부채 관련 부실확대 가능성
- ◆ 건설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실 확대 및 대출 위축 가능성
- ◆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등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정책
 - 상호금융 주담대 여신심사 강화 및 비주담대 규제 강화
 - 저축은행의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정책당국의 부실위험 축소 노력 유도
- ◆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제한에 따른 리스크 관리 변화의 필요성
- ◆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본격화에 따른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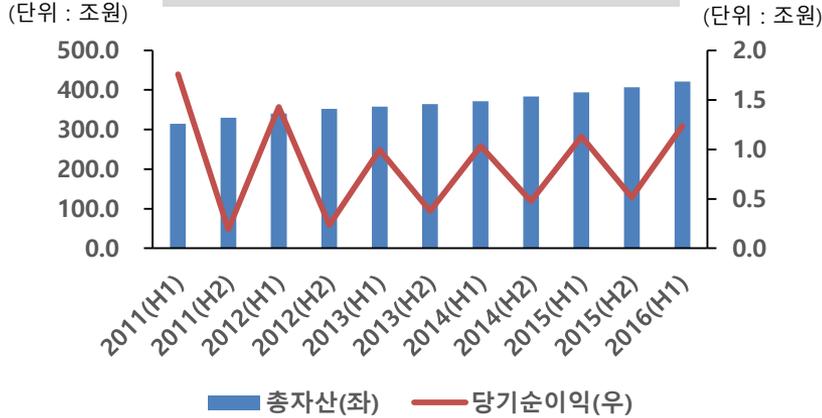
다. 2017년 경영성과 방향

◆ 정책당국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성장세는 2016년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연체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상호금융, 저축은행 모두 수신확보의 용이함은 지속될 전망
 - 상호금융은 비과세 예금 혜택이 지속되며 수신 확보 용이
 -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금리민감도가 높은 예금수요를 바탕으로 수신 확보 용이
- 상호금융의 경우 집단대출 관리강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대출 유도 등 정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로 제한적인 성장세 유지
 - 다만 예대율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일부 단위조합에서 대출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
- 저축은행 역시 가계신용대출 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며 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가능성
 - 다만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며 햇살론과 함께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정책자금 대출이 확대될 전망
- 연체율의 경우 상호금융, 저축은행 모두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추세가 유지되나, 금리,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 리스크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 수익성의 경우 대출증가는 긍정적이나 업권내 및 업권간 경쟁 심화,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요구 확대 등이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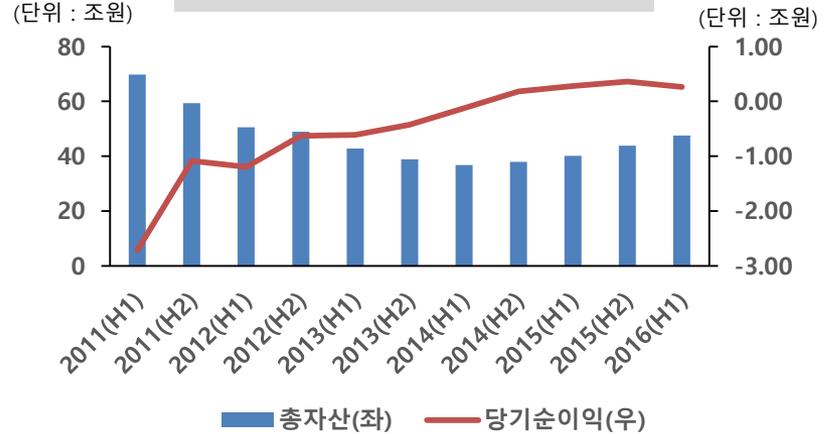
다. 2017년 경영성과 방향

상호금융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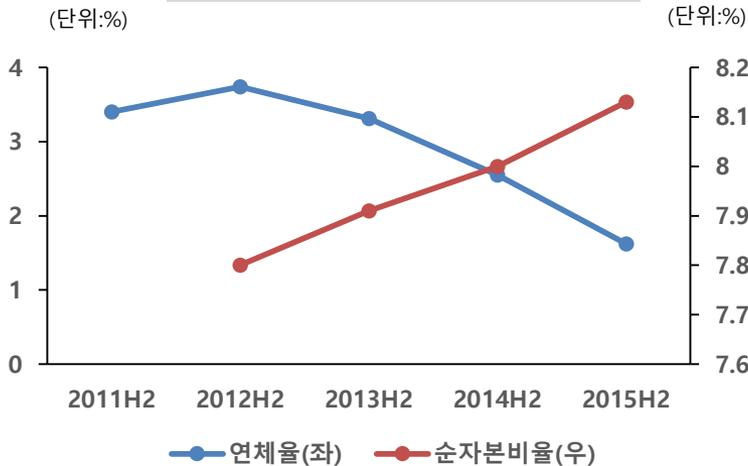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성장성 및 수익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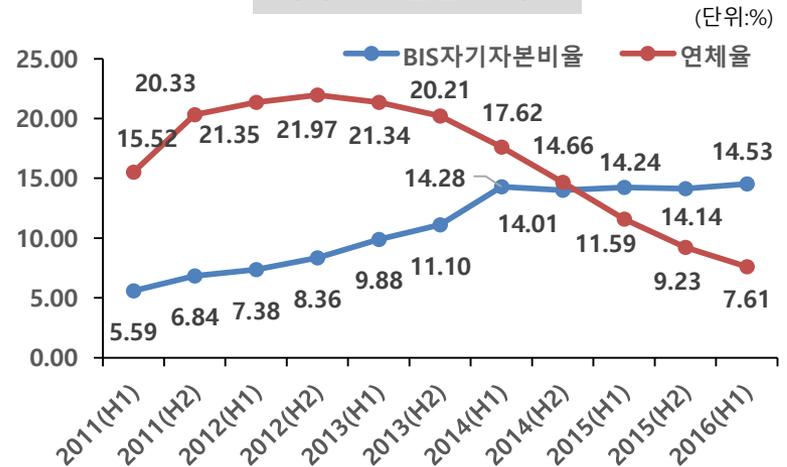
주 :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기가 12월로 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연체율 및 순자본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주 :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기가 12월로 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라. 2017년 경영·정책 과제

◆ 업권간 경쟁심화 속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차별적인 영업전략 수립

◆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 대출 활성화 요구 등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중금리 대출 영업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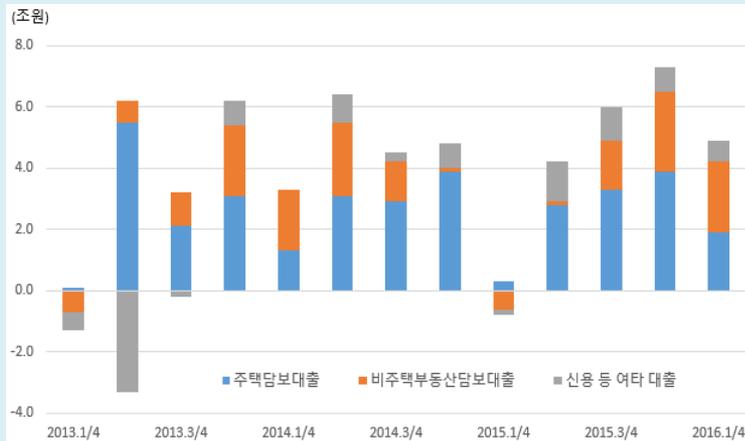
◆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각 업권에 적합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수립

◆ 비대면 대출, 대출모집인 대출 등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참고> 상호금융 가계대출 추이 및 관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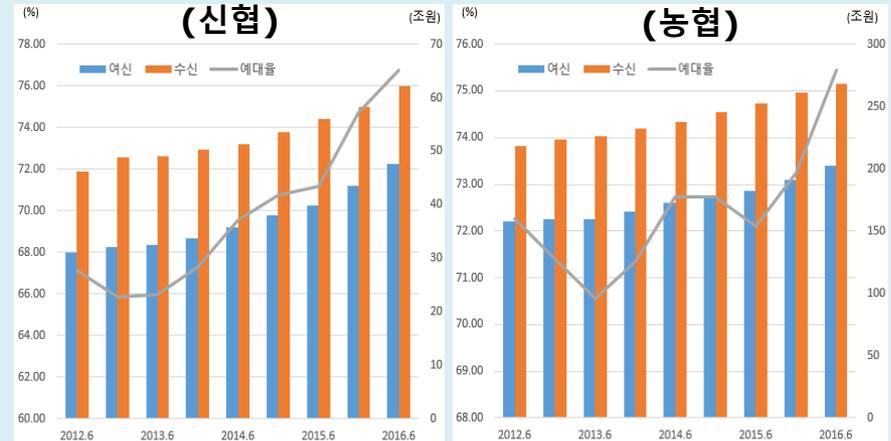
- ◆ 최근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심사, 비주담대 한도규제 등을 강화
 - 2016년 하반기 중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할 예정
 - 비주담대 LTV를 현재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비율산정방식을 합리화
- ◆ 다만 비과세 혜택 등과 함께 수신증가세가 견조한 상태에서 예대율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총액적인 측면에서는 대출이 확대될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총액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수신 및 여신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예대율 규제를 현재 80%에서 10월 이후 90%, 2017년부터 100%로 완화할 예정

최근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저자수정)

상호금융 여수신 규모 및 예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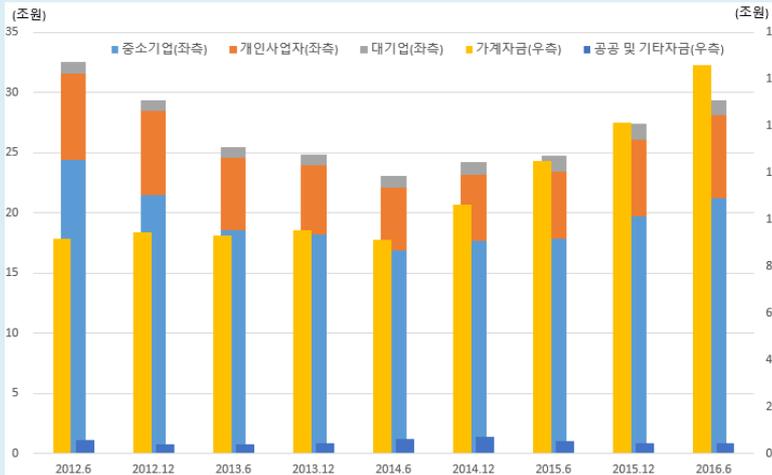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저축은행 항목별 대출 추이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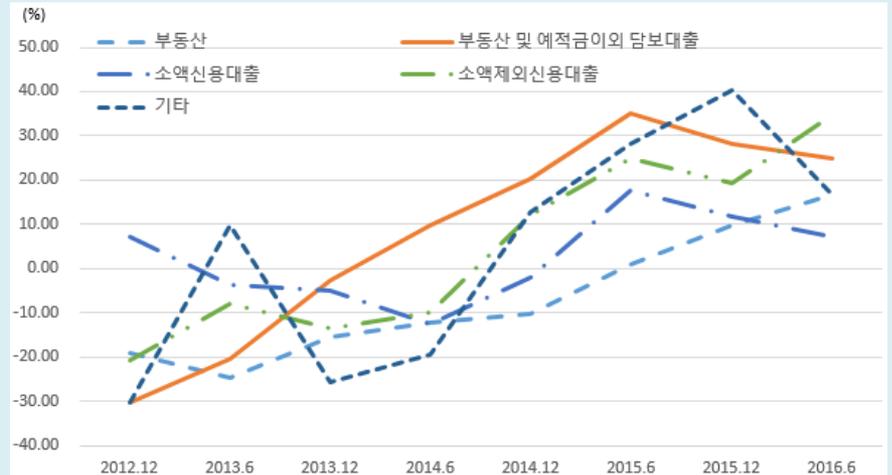
- ◆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규모는 기업자금보다는 가계자금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
 - 담보종류별로는 신용대출 증가율이 담보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액이 아닌 신용대출, 부동산 및 예적금이외 담보대출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신용대출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대출경쟁이 심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업행태, 자산건전성을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
 - 저축은행에 적합한 여신심사 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필요

상호저축은행 용도별 대출규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주요 담보별 대출 증가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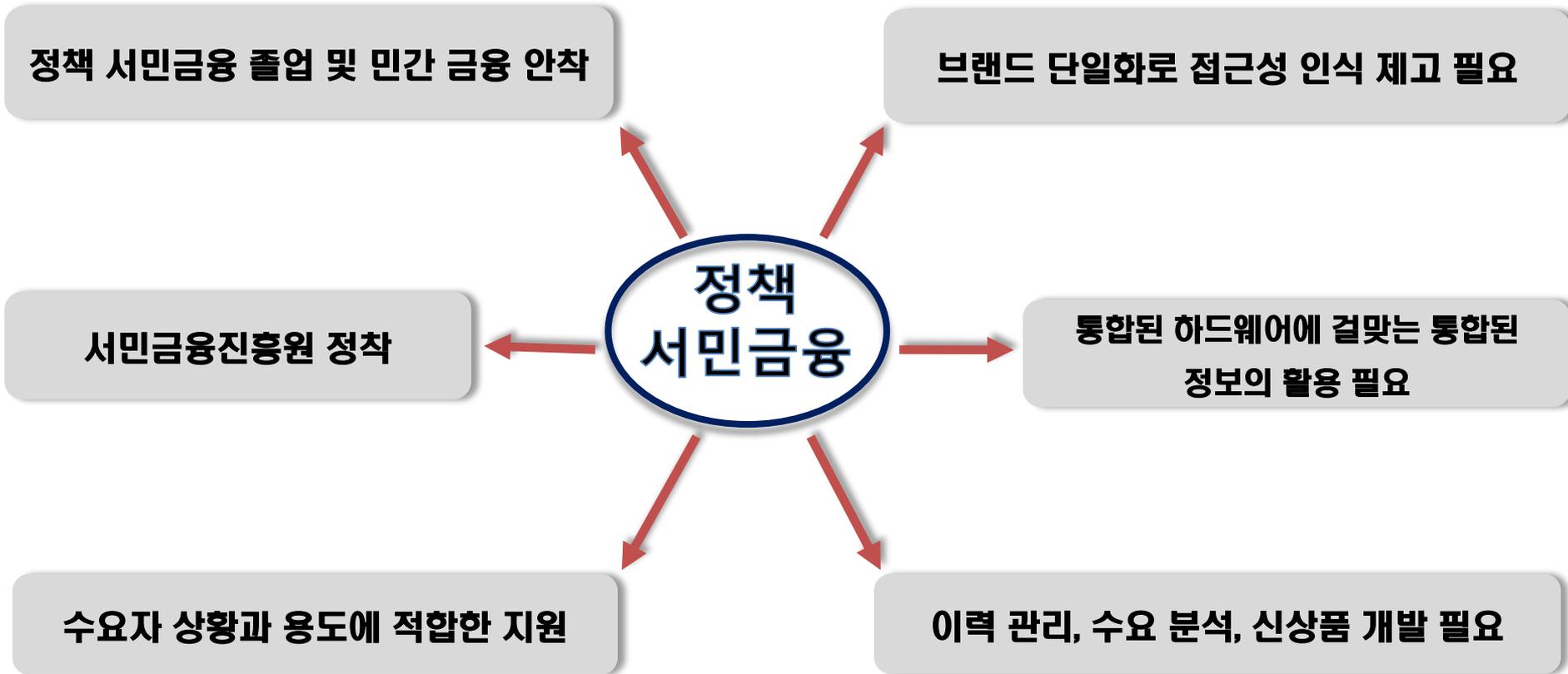
Ⅲ. 금융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1. 개관
2. 보험산업
3. 여신전문금융업
4. 서민금융기관
- 5. 정책 서민금융**

가. 2017년 정책 서민금융 환경

◆ 2017년 정책 서민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착이 환경을 좌우할 전망

- 하드웨어 통합에 걸맞는 통합된 정보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소비자를 시점별로 관리할 필요



나. 2017년 전망 요인

- ◆ 2017년 정책 서민금융은 하드웨어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착과 소프트웨어로 서민금융 정보의 통합을 추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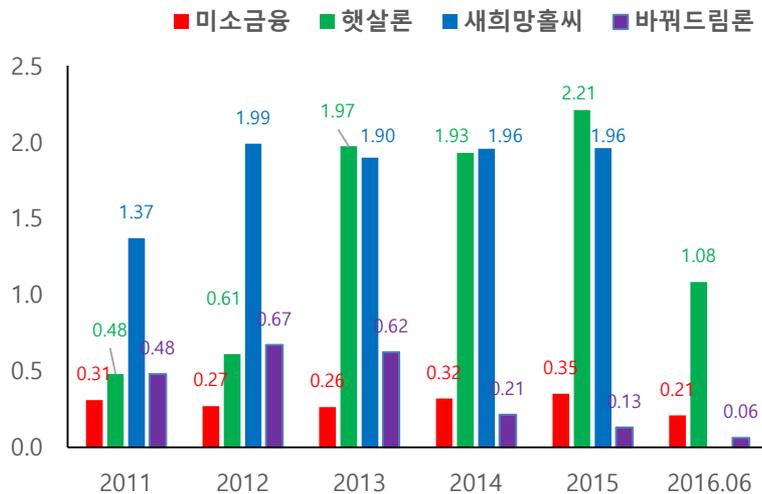
기회요인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 포괄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 단일 브랜드 추진 ▪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본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뀌드림론, 햇살론 대위변제율의 상승세 지속 ▪ 자금지원-채무조정 연계의 부작용 잠재 ▪ 신설 통합 조직의 우수 인력 유출 가능성 잠재

다. 2017년 성과 방향

-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금융지원 통할로 효율성 향상을 기대
-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조기에 실현될 경우 건전성 관리 향상을 기대
- ◆ 지원 규모는 통합 조직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15.06.23)』을 어떻게 계승·추진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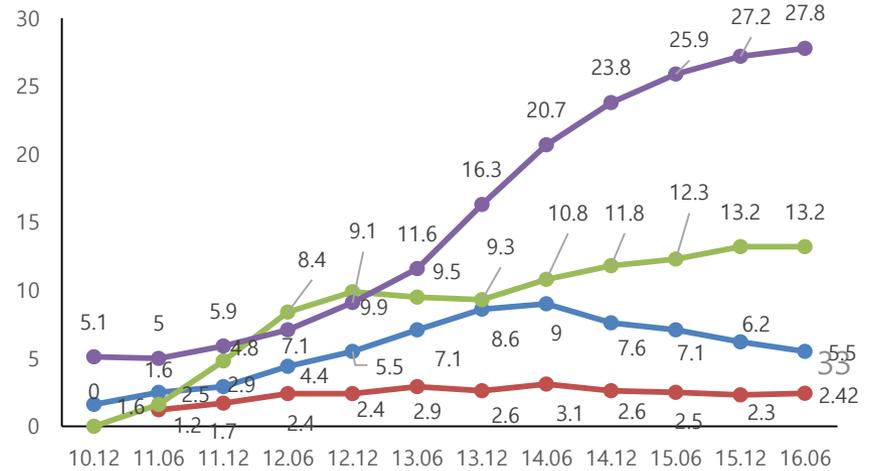
대출실적

(단위 : 조원)



부실률

(단위 : %)



미소금융(연체율)

새희망홀씨(연체율)

햇살론(대위변제율)

바뀌드림론(대위변제율)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 : 2016년 상반기 새희망홀씨 실적은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표기하지 않았으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15.06.23)에 의하면 2016년 예정 지원 규모가 연간 2.5조원임

자료 : 금융위원회

라. 2017년 정책과제

◆ 서민금융진흥원 정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 및 적합성 제고

하드웨어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 유기적 결합**
 -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일선 업무 질적 관리
 - 지자체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계 기능 원활화
 - 한국이론 기능 양수에 따른 제도권 편입 대상자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 **서민금융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 하드웨어 통합에 걸맞는 통합된 정보 구축
 - 이력(t-1) 관리, 수요(t) 분석, 신상품(t+1) 개발
 - 단일 브랜드 추진 완료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수요자 상황과 용도에 맞춘 지원

서민금융시장

-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서민금융의 상생 모색**
 -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본분 찾기
 - 서민금융진흥원의 비대화 경계
 - 은행, 저축은행의 사이트 돌 대출 활성화
 - 정책 서민금융은 가격 중심 지원에서 접근성·가용성 중심 지원으로 전환
 - 징검다리론,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 활성화로 정책 서민금융의 시장선도기능 다각화

<참고> 국내 서민금융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

◆ 한국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

* 구정환·이규복·김석기 (2016),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6-03

- 무직/임시직·일용직 : 정규직에 비해 낮은 이자율보다는 간편한 절차를 희망
- 절차가 복잡할 경우 일당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무직/학생/주부 : 정규직에 비해 원하는 대출한도가 높지 않음
- 과거 대출 거부 경험자 : 낮은 이자율보다는 간편한 절차, 자격요건 완화를 희망
-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수요자 : 미소금융 수요자에 비해 더 낮은 이자율 희망, 간편한 절차는 덜 요구
- 미소금융 수요자 : 햇살론 수요자에 비해 자격요건 완화를 더 요구

◆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시사점

- 수요자 특성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이
- 유형별 분류와 정성적 정보 축적을 통해 맞춤형 상품설계에 활용 가능

<표> 고용형태별 정책 서민금융 개편 요구 사항

	정규직	임시직·일용직	자영업	무직·학생/ 주부·기타
더 높은 대출금액한도	22.94	20.50	21.62	17.83
더 낮은 이자율	25.27	17.63	19.19	14.73
빠른 대출	4.12	8.99	2.43	8.53
간편한 절차	18.82	22.30	20.81	18.60
자격요건 완화	22.04	22.30	27.30	28.68
상환기간 연장	2.69	2.88	2.97	3.10
홍보강화	3.76	4.68	5.41	7.75
기타	0.36	0.72	0.27	0.78